

「2023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 토론

전윤경

I. 들어가며

먼저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발제자께서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분석해 주시고, 관련 제도의 개선 경과로서의 신상공개제도 및 무차별 범죄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23년도에는 일명 ‘부산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많은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도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제자께서는 이러한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차별 범죄의 원인 분석,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연구,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토론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성에 대한 ‘무차별 범죄’와 ‘여성폭력’을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사 발제자의 결론과 같이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적어도 연구 대상인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의 유형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을 위하여서도 ‘여성폭력’의 유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과 유형이 명확해진 이후에야 실증적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발제자께서 용어로 사용한 ‘무차별 범죄’의 개념, 특히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의 유형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발제자께서 주장하는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의 구체적인 표지(유형)가 어떻게 되는지, 발표자께서 제안하는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II.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질문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분석이 필요한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는 ‘무차별 범죄’에 대하여 실무상·강학상 그 개념과 범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 및 ‘가해자의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념요소로 한다고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기존에 언론 등이 가해자의 동기에 방점을 두고 사용한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범행의 형태나 피해자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상동기 범

죄’라는 용어는 동기만으로 본 범죄의 특성을 설명하게 될 경우 다른 원인이 배제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의 주요 사건으로 ①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사건 ②과외 앱 통해 여성 살인사건 ③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들 중 특히 위 ①③의 경우에는 ‘강간하기 위하여’라는 ‘동기 내지 목적이 분명’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념요소로 하는 ‘무차별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발제자께서 발제문에서 인용한 논문인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에서 저자는 “‘무차별 범죄’란 ‘가해자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강도, 성폭력 등과 같은 ‘도구적 범죄’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서¹⁾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비면식 관계라는 점에서 ‘무차별 범죄’와 동일하지만 범죄의 동기가 ‘금전적 이득 추구’, ‘성적이득 추구’ 등이라는 점에서 도구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 범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범죄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²⁾

대검찰청은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에서 “묻지마 범죄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으로써,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무동기 범죄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수사 및 처벌, 교정과 교화, 사회복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유형의 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범죄 내에 포섭되는 범죄 형태를 규정할 필요성 있다”는 전제하에 실무상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손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즉 살인, 상해, 방화,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정의하여 폭력의 동기에 특정한 목적과 이득이 있는 강도죄, 강간죄 등은 묻지마 범죄에서 제외하고 그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³⁾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에서도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불특정한 피해자라는 점, 셋째 폭력 행사라는 것이고, 성폭력범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만족’이라는 일차적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용어가 ‘무차별 범죄’이든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이든 그 개념요소는 발제자가 말씀한 것과 같이 ‘범죄 대상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이고, ‘범행의 동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물질적 이득이나 성적인 만족 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적 범죄들은 행위 자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표출적 범죄와 그 특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박형민,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0호, 2013, 233면.

2) 박형민, 위의 논문, 234면.

3)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2015. 8, 8-10면.

4)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성,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AB-03, 2014, 28-30면.

그렇다면 발제자께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불특정한 여성’인 모든 범죄(또는 폭력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기반’한 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폭력방지기본법에서의 ‘여성폭력’⁵⁾ 범죄를 말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범죄 유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 대상의 개념과 유형이 명확해진 이후에야 실증적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며, 범죄 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⁶⁾

III.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에 대한 질문

대검찰청은 ‘묻지마 범죄’를 분석함에 있어 죄명별 발생현황, 피의자 직업 유형, 피의자 연령, 범죄 전력, 범행 시간, 범죄 발생 장소, 범행 도구, 범행 촉발요인, 피해자 성별 및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총 18가지의 유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⁷⁾ 그 중 피해자 성별 및 연령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의 총 피해자 100명 중 성별은 여자 58명(58%), 남자 42명(42%), 연령은 10대부터 50대 까지 약 16%대로 비슷한 비율이고, 2013년의 총 피해자 102명 중 성별은 여자 49명(48%), 남자 53명(52%), 연령은 4-50대가 45명(46%)이며, 2014년의 총 피해자 86명 중 성별은 여자 35명(41%), 남자 51명(59%)이고, 연령은 10대부터 60대 까지 11명에서 17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⁸⁾ 또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촉발요인)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163건의 분석 결과, 현실불만이 39건(24%), 정신질환이 59건(36%), 마약·알콜 등 남용이 58건(35.5%), 기타 7건(4%)으로 파악하였습니다.⁹⁾

발제자께서는 전체범죄, 강력범죄 및 주요범죄군의 여성 피해자 발생건수와 비율은 대검찰청 범죄통계로 확인할 수 있으나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에 대한 세부 통계 자료는 현재 없는 실정이므로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통계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위 대검찰청의 분석 유형과 같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지(유형)가 있어야 하는바, 현재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죄명별 여성 피해자의 발생건수와 비율 및 연령’ 이외에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통계 표지(유형)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6) 참고로 2014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여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지침서(Handbook on effective prosecution responses to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적인 또는 사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난 협박, 강요,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또는 유발할 수 있는 젠더에 기초한 폭력 행위”로 정의되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였다.

7) 대검찰청, 앞의 책, 14-83면 참조.

8) 대검찰청, 앞의 책, 76-77면.

9) 대검찰청, 앞의 책, 49-59면.

IV.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정책에 대한 질문

대검찰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촉발요인)으로 정신질환, 마약·알콜 등 남용, 현실불만으로 분석함에 따라 2015년 묻지마 범죄의 대응방안으로 정신질환, 마약·알콜 등 남용에 대한 대책 및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의 적극적 활용,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적극 활용,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적극 검토, 치료보호제도 도입, 보호수용제 도입 등을 그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¹⁰⁾ 2023년 8월에도 법무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정부 총력 대응”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흉악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23년 10월 31일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한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¹¹⁾

발제자께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 경과로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 절대적 종신형 제도나 사법입원제도가 ‘여성 대상 무차별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외에도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청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대검찰청, 앞의 책, 156-160면.

11) 의안번호 212523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무기(無期)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형법」에 따른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여 무기형의 유형에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여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